지난해 광주시가 주관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참여한 등산객들이 정상 3봉 중 하나인 지왕봉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63% 화순·담양 37%
함께 가꾸고 보전 힘써야

국립공원 무등산 5대 과제

❺ 자치단체간 협력 절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한 달도 안돼 구설수에 휘말리는 신세가 됐다. 광주시와 환경부가 탐방객을 위한 친환경 시설 설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가 무등산 일대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자체·주민·시민단체·전문가 포함
'무등산 공동 관리위원회' 구성 시급

이에 대해 광주시와 환경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현실성도 없다며 반박했지만 광주·전남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사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면적만 놓고 보면 광주 동구·북구(63%), 전남 화순·담양군(37%) 등 2개 시·도와 4개 자치단체가 얽혀있는 만큼 전남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개발·관리방식 등을 놓고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와 환경부간의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는 이유다.

무등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국립공원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이처럼 잦은 의견대립이 발생할 경우 사업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광주시, 전남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4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 '무등산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공원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공원사업의 우선 순위, 정상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 현안사업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등산이 타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150만 인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주체가 돼 관리하고 가꾸는 '시민 거버넌스(공공경영)'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오는 2월 중순까지는 관련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9일 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하고, 광주 상무지구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했다.

광주시 무등산공원 담당 이수원씨는 "현재 국립공원 무등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중이다"면서 "오는 3월 4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공식 업무를 개시하는 한편 환경부 등과 함께 무등산 개발 등에 따른 비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시민과 협력, 무등산 전국 최고 명산으로 만들겠다"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 준비단장

"군부대 이전·방송 통신시설 통합 당연"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준비단장이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옥상에서 국립공원 무등산의 향후 관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린 시절 집 마당에서 무등산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관리를 맡게 된 만큼 광주시민들과 협력해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10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한 안시영(55) 무등산국립공원 준비단장은 "무등산 정상이 보이는 집에서 살았는데, 계절마다 친구들과 오를 정도로 무등산을 좋아했다"며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그 첫 번째 관리 임무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광주 효동초교와 동성중을 거쳐 광주고와 아주대를 졸업한 안 단장은 또박또박 쓰는 표준어에다 깔끔한 첫인상이 토종 서울 출신으로 보이지만, 광주 첨단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 토박이다.

안 단장과 함께 광주로 내려온 무등산국립공원지원단원 10명도 광주·전남이 고향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년 만에 지정된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게 안 단장의 말이다. 무등산국립공원지원단원 전체를 광주·전남출신으로 배치한 것도 지역민과 함께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 단장은 "그동안 독도와 태백산 등 여러 곳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됐지만,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열돼 결국 실패했다"며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 광주시의 뚝심에 대해 환경부는 물론이고 타 자치단체들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무등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확고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선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 시설 통합에 대해 "당연한 것이며, 최대한 빨리 이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무등산 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이미 공원개발 계획이 수립 고시된 만큼 신규시설인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등이 들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안 단장은 사유지매입 계획과 각종 규제의 우려와 관련해선 "향후 1000억원 규모의 사유지 매입비가 투입돼 현 70%대에 이르는 사유지 비율을 30%대로 낮출 계획이며 올해엔 일단 15억원이 매입비로 편성됐다"면서 "규제부분은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규제법이 같지만, 국립공원은 야영이나 취사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국립공원의 가장 큰 목적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국민과 후손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공원내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무등산 개발을 위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단장은 오는 3월4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선포식과 함께 무등산관리사무소장을 맡아 무등산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주관하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군부대 이전 등 7개 현안 추가 건의

광주시, 인수위에

광주시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등 7개 프로젝트 이외에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와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등 7개 현안사업을 추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합 문화예술사업 지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7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광주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빛고을 고령친화사업 육성 ▲광주 군사시설 및 무등산 통신탑 조기 이전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적 개최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지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광주은행 지역환원 추진 등 7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추가로 선정된 7개 사업을 '대통령선거 광주발전 공약사업 추진위원회'와 논의·결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김종효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은 "인수위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 설명해 새정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사돈 남말하고 있습니다